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 금융감독원	보도	9.24(목) 10:00부터 보도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김 태 훈 서기관(02-2100-2533) 이 소 민 사무관(02-2100-2536)
	금융위 은행과장 박 민 우(02-2100-2950)		이 종 림 사무관 (02-2100-2951)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(02-2100-2970)		윤 동 욱 사무관 (02-2100-2971)
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박 주 영(02-2100-2620)	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621)
	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김 용 태(02-3145-7120)		김 부 곤 팀장 (02-3145-7125)

제 목 : 제2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최

- 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
- ② 금융부문 인증,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,
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
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안별로 정책방향 제시

[플랫폼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 관련]

- 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“투명성 확보” 등 제도적 장치 마련
- ②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 신속히 진행
- ③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

[금융분야 인증,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]

- 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,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기반 마련
- 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하도록 안전장치 강화
- ③ 인증,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분담 명확화

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 사안별로 밀도있게 토론

- 대형 플랫폼 기업 진입에 따른 규율 필요성 등은 대체로 공감
- 다만,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,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수준과 속도 등은 면밀한 논의 필요

1 제2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요

- '20.9.24(목)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서는
 - ①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,
 - ② 금융부문 인증·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
-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,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- 이번 회의부터는 i)핀테크 부문, ii)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,
 - i) 류준우 보맵 대표(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)와
 - ii)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(여전협회 추천 위원)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하였습니다.

※ 제2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요

- 일시 : '20.9.24(목) 10:00~11:30
-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
 - (공동주재)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, 정순섭 서울대 교수
 - (금감원) 김근익 수석부원장
 - (금융권)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,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,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,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
 - (빅테크 등) 김용진 서강대교수,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
 - (전문가) 정준혁 서울대교수,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, 강경훈 동국대교수
 - (노조) 최재영 금융결제원(금융산업노조 추천), 김준영 신한카드(사무금융노조 추천)

※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

2 회의 주요 내용

-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.

[1]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

-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,
 - i)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,
 - ii)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,
-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“투명성”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- * 예 : ①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(중개, 광고, 추천 등)에 대한 고지의무
 - ② 연계·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·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
 - ③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
-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“공정성”, 제조·판매 과정에서의 “책임성”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

→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 반영

②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

- ①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“소비자 정보주권”의 시각에서 접근
-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
(예 :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, 건전경쟁 기여도 등)
- ③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
(예 : “알고하는 동의(informed consent)” 등)

→ 위 세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 「디지털 금융협의회」에 상정

③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

- 플랫폼과 기존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
- “동일서비스 동일규제” 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

→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조속히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에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논의

[2] 금융분야 인증,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

- 인증,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,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,
- 인증,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,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.

①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,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

- 단순한 정보조회,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,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
-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,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

②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

- 대출,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 및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
- 위조신분증,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,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“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”을 법제화

③ 인증,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

-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,
-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절한 협력의무를 부과

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,

-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,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,
 - 산업환경, 경쟁질서,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.
-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,
 -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,
 - “동일서비스 동일규제” 원칙 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.
- 다만,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서,
 -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

※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주요 발언내용은 회의 직후 정리해서 별도로 배포할 예정입니다.

[첨부]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